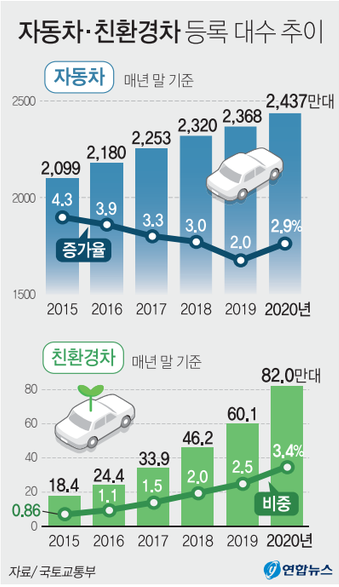
신차 판매 호조…국내 차 등록대수 2천437만대



국민 2.13명당 차 1대 보유…전년比 2.9% 증가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차 80만대 돌파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430만대를 돌파해 국민 2.13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80만대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436만5천979대(이륜차 229만대 제외)로 전년 말(2천368만대)보다 약 2.9%(69만대)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으로, 미국(1.1명), 일본(1.7명), 독일(1.6명)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2018년 3.0%, 2019년 2.0%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9%로 상승했다.

특히 신규등록 자동차가 2019년 180만대에서 지난해 191만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신차 출시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록 대수는 82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2.5%)보다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친환경차 비중은 2014년 0.7%, 2015년 0.9%, 2016년 1.1%, 2017년 1.5%, 2018년 1.9%, 2019년 2.5%, 지난해 3.4%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친환경차 종류별로는 전기차가 13만4천962대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하이브리드차(67만4천461대)와 수소차(1만906대)는 각각 33%,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승용차가 34%, 승합차 122%, 화물차 1천254% 증가했다.

전기 화물차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19년 7월부터 1.5t 미만 전기 화물차에 대한 운수사업용 허가 대수 제한이 없어지고, 대규모 제작사들이 잇따라 1t 전기 화물차를 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 말 등록 대수 893대에 불과했던 수소차는 2년 만에 1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

신규등록 차량을 사용 연료별로 보면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더 뚜렷했다.

신규등록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 점유율은 2018년 6.8%에서 지난해 11.8%로 상승했으나, 경유차 점유율은 2018년 43%에서 지난해 31%로 내려갔다.

특히 다목적형 경유 승용차(SUV)에 대한 수요 상당수가 휘발유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등록 대수 중 국산차는 89.0%(2천168만대), 수입차는 11.0%(268만대)를 차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중고차 거래 건수는 387만4천대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진흥원, 무료 법률자문단 운영

권리침해·불공정거래 등 기업 애로 해소 기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20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디자인 기업,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법률자문단은 지역 디자인기업 등이 겪고 있는 디자인 권리 침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권리 보호와 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운영, 노무 세무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까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꾸렸다.

디자인진흥원은 또 기업 등으로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을 연계해 무료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분쟁사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은 "디자인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의 디자인 권리, 불공정 등 피해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피해 해결,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제2의 달걀파동' 막는다…한시적 관세 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여파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던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최근 관내 한 계란판매점에서 위생상태 및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김애리 기자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햇살론youth 1천억 증액…소상공인·특고 지원 잰걸음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미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천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투데이 경제

光銀, 정병석 前 전남대 총장에 감사패

광주은행은 제20대 전남대 총장의 임기를 마친 정병석 前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2017년부터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첨단분야 학과 개편 ▲연구과제·연구비 규모 최상위권 유지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유치 ▲'민주길' 준공 등 문화캠퍼스 조성 등에 힘써 전남대학교를 내실있는 미래지향 대학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육성과 학문공동체 구현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정 전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은성 기자

호반건설·호반산업, 신입·경력 공채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상반기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신입은 90명, 경력은 6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서류전형, 1차 면접,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신입사원 해당), 2차 면접, 채용 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호반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천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조 회장 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